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 10월 14일 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업계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 소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2(화)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이하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10.14(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 (시간) 10.14(월) 14시 (장소) 정부세종청사

(참석)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1종 보통시멘트(원/톤) : ^(20.7)75,000, ^(21.7)78,800, ^(22.7)92,400, ^(23.7)105,000, ^(24.7)112,000

수도권 레미콘(원/m³) : ^(20.7)66,300, ^(21.7)67,700, ^(22.7)80,300, ^(23.7)88,700, ^(24.7)93,700

-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이다.

* 레미콘 원가구성(추정) : 시멘트 30%, 골재 20%, 운송·유류비 20%, 인건비 등 기타 30%

** 벽돌, 블록, 몰탈, 전신주, 파일, 흙관 등 콘크리트 제품 등

-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특히, 시멘트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는 한편,
 -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총괄	국토정책관 건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전인재	(044-201-3538)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1-4585)